



광주 구의회간 인사 교류 실현 주목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 기초의회 의장들에 제안

인사 적체 해결책·원활한 의회 운영 등 기대 ↑

올해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가운데 광주 5개 기초의회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각 구의회 소속 공무원들 간 인사 교류 방안을 검토키로 해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지난달 말 구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협의회장 선출을 위해 5개 구의회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자체 인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규모가 작은 구의회 조직 현황을 감안해 5

개 구의회 소속 직원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사협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인사 적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와의 교류도 있지만 한정된 부분이 있다"며 "구의회도 서로 인적 자원 교류가 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제안 후 각 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인사협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5개 구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 1일 북구의회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과 운영위원장단 협의회 구성 등을 협의했으며 구의회 간 인사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도 논의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갖게 됐다.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전 기초의회 공무원의 경우 인사권자인 구청장에 의해 인사가 이뤄졌다. 의회에 결원이 생기는 등 인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에 요청, 부서 간 이동 개념인 전보 형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기초의회는 의회에 필요한 인원을 집행부에 요구하기 어려웠고 보내주는 대

로 받아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기초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교류'는 전·출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제9대 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각 구의회는 인사협약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인사 교류가 많을 수록 의회 운영이 원활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집행부와 교류가 있지만 구의회 조직이 작은 만큼 인원 수가 적어 승진 적체 등 인사 잡음이 발생하거나 육아휴직 등 복지자들의 결원을 채워줄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강승희기자



경찰국 설치 규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시 대대적 행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3일 시의회 앞에서 경찰국 설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행안부 경찰국 신설 지역 정치권도 '반발'

광주 시·구의원 성명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광주지역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5개 자치구의회 의원 등 50여명은 3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는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의원들은 "1991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청이 독립된 이후 31년 만에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며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은 "경찰국 설치 강행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경찰의 성찰과 반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이자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온 경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철학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은 "헌법 제96조에서도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정부조직법 또

한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조직법이 아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 공정을 모토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을 수사하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개혁방안 전면 재논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국은 경찰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이후 석 달여 만인 지난 2일 출범했다.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와 내무부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겼다. /박선강기자

Today	
민주화운동 사랑방 '봄심정'	6면
조선대 '총장 징계' 갈등 심화	7면
은행, 금리 올리고 성과급 잔치	13면

제14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접수 10월28일까지...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인정



지난해 제13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대상 박병철 작 '피라미드의 탄생'

광주매일신문은 사진예술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제14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애호가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14회째를 맞은 광주매일신문 사진대전은 그동안 창의성이 돋보이는 우수한 수상작을 배출하는 등 전국 최고 권위의 사진대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출품대상은 지역이나 주제에 제한 없이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미발표 작품이면 됩니다. 입상작은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가 인정됩니다. 전국 사진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성원을 바랍니다.

- ◇주 최 : 광주매일신문·CE21
- ◇주 관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 작품내용 : 미발표 작품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컬러 또는 흑백사진
- 응모자격 : 일반부문=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중·고교 재학생
- 출 품 료 : 1인당 30,000원 / 4점 이내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 접수기간 : 2022년 10월28일까지(도착분)
- 접 수 처 :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삼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062-234-2323)

광주·전남 10일만에 또 '더블링'

지난달 23일 3천446명→이달 2일 7천188명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일 만에 또 다시 '더블링'되며 7천명선을 돌파했다. ▶관련기사 2면 3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광주·전남 확진자는 7천188명(광주 3천553명, 전남 3천6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 3천446명(광주 1천670명, 전남 1천776명) 이후 10일 만에 2배 이상으로 폭증한 수치다. 광주·전남에서 하루 7천명대 신규 확진은 지난 4월20일(광주 3천176명, 전남 3천975명) 이후 105일 만이다.

지난 2주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18~23일까지는 3천명대를 기록했다. 휴일인 24일엔 2천99명으로 줄었다가 25일에는 4천861명, 26일 5천527명까지 늘었다. 27일부터 30일까지 4천명대를 유지하다 휴일인 31일 2천943명이 감연되면서 감소세를 기대했으나 지난 1일 또 다시 5천780명이 확진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3천410명, 전남 2천959명 등 총 6천369명이다. /박선강기자

광주광역시 중앙근린공원(1지구) 민간공원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현장 주민설명회

- 행사 일시 : '22. 8. 06.(토요일) 오전 09:00, 오후 15:00 (2회)
- 출발 장소 : 풍암호수 3목교 근처 (제방 위)
- 행사 내용 : 풍암호수를 함께 걸으면서 조성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2시간 소요 예상)
- 설 명 자 : 중앙근린공원(1지구) 계획 및 설계 총괄기술자
- 참석 대상 : 풍암호수 조성계획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당일 폭염이 예상되므로 모자, 양산, 개인음료 등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분은 참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문의 : 062-372-6102(빛고을중앙공원개발)

